

제 3 교시

논술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C의 입장에서 A, B 두 입장을 모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하십시오. 이 때, 두 입장이 <보기>의 두 논제에 관하여 각각 어떤 주장을 제시할지 밝히고 이를 비판하는 순서로 작성하십시오. (900~1200자, 40점)

<제시문>

현재의 애국가는 1936년 안익태가 작곡하였다. 가사는 윤치호가 지었다는 설이 있으나, ‘애국가작사자 조사위원회’는 1955년 작사자 미상으로 결론지었다. 안익태에게 작곡자로서의 음악 저작권이 있는 애국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로 사용되었는데, 1965년 안익태가 스페인에서 사망한 이후로는 그곳에 남아 있는 유족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족들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애국가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 협회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애국가가 저작권의 대상이라는 것과 안익태의 유족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2003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축구 구단들을 고소하면서 애국가의 저작권 문제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의 국내 법령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였고, 따라서 2015년까지는 유족에게 저작권이 보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경험한 국민들은 온 국민이 사랑하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창하는 애국가에 과연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일각에서는 국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안익태의 유족들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무상 기증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었다. 애국가와 같이 공공의 사용이 중요한 저작물에 관해 개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 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저작물의 성격을 불문하고 저작권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A 입장), 둘째, 저작물의 성격과 관계없이 아예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B 입장), 셋째, 수용 및 보상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C 입장)이다.

<보기>

○ 논제 1: 창작자의 노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 논제 2: 문화의 향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2. <제시문> (가), (나), (다) 각각의 입장에서 <보기>의 개선안 중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할지 설명하고, <제시문> 중 어느 입장이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할지 다른 입장들과 비교를 통하여 논술하십시오. (1300~1600자, 60점)

<사례>

A국 공공기관은 채용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대체로 매년 응시자의 3%만이 합격한다. 채용 시험의 합격은 직업적·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므로, 능력과 노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응시자들의 사회적 배경, 즉 부모의 직업·수입·학력과 당사자의 출신 지역 등을 계량화하여 분석·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합격자의 ‘사회적 배경 지수’가 불합격자의 평균적인 사회적 배경 지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또 이러한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 때문에 이런 채용 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게 되자, A국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보기>의 안들이 제시되었다.

<보기>

[1안] 모집 인원 전체를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사회적 하위 계층*의 지원자에게 사회적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채용 시험 성적, 최종 학력, 학교 성적, 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고려한 심사를 통하여 채용한다.

[3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사회적 하위 계층 지원자 중 최소한의 직무 수행 기본능력을 고려하고 봉사활동 경력 등에 나타나는 공공적 지향과 태도를 평가하여 선발한다.

* 사회적 하위 계층 = 사회적 배경 지수 하위 30% 이내.

<제시문>

(가) 아무런 사회적 규제가 없는 자연 경쟁 체제에서, 사회의 분배 제도는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여기서 최초의 자산 분배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소득과 부의 분배는 타고난 자산, 곧 자질과 능력의 선행적 분배의 효과가 누적된 결과다. 다시 말해 타고난 자산의 선행적 분배가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른 결과다. 이런 경쟁 체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그 체제에서는 도덕적 관점에서 아무런 본질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 요인들 때문에 배분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요구 조건에 실질적 기회 균등이라는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자고 한다. 직위는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삶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 기회 균등의 체제는 사회 속에서 우연적 요인의 작용을 줄이는 장점은 있어도 여전히 천부적인 재능과 능력에 따라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도 도덕적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배가 천부적 자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용인할 이유도 없다.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도 부당하며, 이러한 불평등 역시 어떤 식으로든 교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는 더 불리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물론 천부적 자질을 더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마땅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 순자(荀子)는 말했다. “대체로 양편이 모두 귀한 사람이면 서로 섬길 수가 없고, 양편이 모두 천하면 서로 부릴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늘의 섭리이다. 세력과 지위가 같으면서 바라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같으면, 물건이 충분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다투게 된다. 다투면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반드시 궁해질 것이다. 옛 임금들은 그러한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禮)의 제도로써 이들을 구별해 주어, 가난하고 부하며, 귀하고 천한 등급이 있게 하여 서로 아울러 다스리기 편하게 하였다. 이것이 천하의 백성들을 기르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는 또 말했다. “덕이 있고 없음을 검토하여 서열을 결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벼슬을 주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할 일을 수행하며 각각 모두가 그의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잘 등용하는 것이다.”

불평등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순자의 이런 통찰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유효하다. 우리는 어떤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어떤 사회 체제에서든 ‘성층화(成層化)’는 불가피하다. 불평등(성층화)은 꼭 필요하지만 꺼리는 직업을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하며 선호하는 직업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한다. 더 나아가 부의 불평등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자극을 준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살고 싶도록, 또는 자신이 느끼는 결핍 상태를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런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완화하려 하면, 사회는 활력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정의에 대한 상식적 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응분의 몫은 다들 수밖에 없다. 특히 능력은 그 응분의 몫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평등이 추구할 만한 좋은 가치 이기는 하지만, 어떤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정당하며 사회 전체에 대해 이롭다.

(다)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는 두 가지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첫째, 인간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며, 이런 지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각자의 삶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오직 그 삶의 주인

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이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거나 평등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여기서의 평등은 사람의 속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삶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시민에게 법에 충성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 공동체는 그들 모두에 대해서 공평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이라는 점 이외의 다른 속성들, 예를 들어 경제적 배경, 성, 인종, 특별한 재능이나 장애 등에 의해 시민들의 운명이 가급적 좌우되지 않도록 법과 정책을 채택하여 그런 요인들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교정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각자의 삶을 선택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심리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며, 더불어 문화나 교육이나 물질적 여건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러나 자원과 문화에 의해 허용된 선택의 범위가 어떻든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선택하는 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소비하기보다는 투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나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이런 결정에서 나름의 이득을 누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명백히 상반되는 이 두 원칙을 조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의 교정이라는 목적을 좇느라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의 포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보상한다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의 분량 미달과 분량 초과는 같은 기준으로 감점됩니다.